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 http://www.mke.go.kr

2010년 11월 2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박영삼 기술규제서비스과장, 사민경 주무관 (509-7255)

정부, 美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 반대의견 표명

- 미국 정보규제국을 방문, 우리 업계 우려 전달 -

□ 정부와 우리 업계는 미국워싱턴에서 11. 23(화) 미국 대통령실 소속 **정보규제국**(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)**을 방문**하여 **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송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**

※ 현재 미 교통부(DOT)에서 마련한 항공운송규정 강화안을 규제심사기관인 정보규제국(OIRA)에서 검토 중이며 관련국가 및 업계 의견 수렴 중

o 우리측은 미측의 규제안이 **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**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 의 대미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

※ 미측 규제안 강행시 업계 추산 **Unit당 최대 US$3의 운송비 증가예상**

□ 미 교통부는 금년 1월 **노트북, 휴대폰,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**가 제품결함, 과다충전, 저장· 포장 부실 등에 따른 **과열·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, 동 규제안의 시행을 예고**하였음.

o 현행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,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으나

o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.6Wh로 강화하여 **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가 위험물질로 분류**되게 되며, 한 상자내에 실을 수 있는 **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** 계획

□ 우리나라의 경우 연 4,000회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 항공운송을 하고 있으나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음을 밝히며 **현 UN,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 규정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**을 피력

o 아울러 미측 규제안의 대안으로 충전률 50% 미만의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은 안전하다는 실험결과를 미측에 설명하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

※ EU,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을 미측에 전달하였으며, 미 2차전지협회(PRBA)도 동 규제안 도입을 강력히 반대

□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**『리튬이온전지 규제대응 T/F』를 구성·운영**하는 한편, **일·EU·중 등과 국제 공조체계**를 구축, 체계적으로 대응

o 금년 3월에는 **국내 3개 단체**(전자정보통신진흥회, 무역협회, 전지연구조합) 명의로 미 교통부에 우리 **업계의 의견을 전달**

o **10여차례 이상의 T/F회의 개최**를 통해 미 규제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·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

o 금년 3월, 6월, 11월 세차례 **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**(WTO/TBT위원회)활동을 통해 동 규제안을 **특정무역현안(STC)으로 문제 제기**

- 동 위원회 참가시 한-일, 한-중, 한-EU 등 관련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

□ 다만, 정부는 미측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, EU, 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**관련업계와 함께 미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**